한강수계법 개정에 따른 건의문

존경하는 이재용 환경부 장관님 !

세계화와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국가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해 애쓰시는 노고에 대하여 무한한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평창군은 한강수계 상류에 위치한 청정지역으로 그 동안 지역개발에 대한 이중 삼중의 규제로 인해 지역발전을 기대하기 힘든 현실속에서도 희생을 감수하며 새로운 도약을 위한 노력을 다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정책의 핵심기조로 하는 참여정부에서 최근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제의 의무제 전환을 주내용으로 하는 한강수계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하여 강력히 유감을 표시하는 바입니다.

국민없는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이 과연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한강수계법의 개정으로 수도권의 인구집중 심화, 지방의 기업유치 실패는 명약관화할 것이며 이에 따른 한강수계 상류지역에 위치한 국민의 생존권은 심각한 위협을 받게 될 것이 분명하고 이에 지방의 공동화를 재촉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는 심각한 우려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 평창군의회 의원 일동은 국민의 생존권이 저해되지 않도록 한강수계법 개정의 전면 백지화를 촉구하면서 조속한 대책마련을 위해 다음과 같이 건의하오니 정부정책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정부는 한강수계법 개정 이전에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국가균형 발전을 위한 분명하고도 확실한 대책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한강수계법 개정으로 인해 한강상류지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와 분석을 실시하고 주민설명회 등을 통한 상류지역 지자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역별 특수성을 인정하는 실천가능한 오염총량제 정책을 수립하고 오염총량제 시행에 필요한 각종오염원 저감대책 수립과 재원확보 방안을 투명하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건의하오니 청정자연을 지키며 살아가는 한강수계 상류지역 주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방향으로 관련법이 개정되기를 기대합니다.

2005. 11. 08

평창군의회 의원일동